

##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실천\*

최 병 덕\*\*

### •요 약•

이 논문에서는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정치적·사회적 실천을 살펴본다.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2·28민주운동을 자발적으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4·19혁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이후 전개된 4월혁명기에도 민주주의 실현과 진보적 사회개혁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당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문제와 경제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자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4월혁명 발생기에는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2·28민주운동을 일으켜 이승만의 반공독재정권에 파열구를 내었고, 4·19혁명이 발생할 때 대학생들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이승만 정권 퇴진의 한 축을 담당했다. 4월혁명 성장기에는 전국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 혁명의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으로 전개한 활동은 학원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그리고 4월혁명 고양기에도 사회운동의 전반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사회개혁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이 전개한 활동은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교사 반환 요구와 한미경제협정체결 반대와 같은 자주화 운동, 그리고 4월혁명 고양기 최대 이슈였던 통일운동과 2대 악법 반대 투쟁이었다.

주제어 : 고등학생, 대구, 4월혁명, 인식과 실천, 2·28민주운동

\* 이 논문은 2022년 화성장학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지원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학술연구비로 수행한 연구이다.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장

## I. 서론

이 연구는 1960년 2·28민주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1961년 5·16군사정변 이전까지 전개된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민주주의 실현과 진보적 사회변화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실천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2·28민주운동이다. 2·28민주운동에서 제기된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의 요구는 4월혁명으로 계승되었다. 지금까지 2·28민주운동에 대한 연구는 그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서 출발해 그 정신과 민주적 함의를 밝히는 데로 나아가 2·28민주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 2·28민주운동이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제2공화국의 수립을 가져왔고 나아가 4월혁명기 제반 민주화운동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2·28민주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4월혁명기에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1)</sup> 대구의 4월혁명을 다룬 기존의 연구를 통해 4월혁명기 대구의 민족민주운동의 전반적 전개 양상과 고등학생들의 실천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대체로 “4월 혁명기 대구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아성이었고, 그 중심에는 대학생이 있었다. 대학생은 4월 19일 시위를 시작으로 학생운동의 주체로 등장하였다.”<sup>2)</sup>는 언급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4·19혁명 이전까지 운동의 중심 세력은 고등학생이었지만 4·19혁명 이후 운동의 중심 세력은 대학생이었다는 이분법적 인식하에 연구가 전개되어 4·19혁명 이후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활동은 대학생들의 활동에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특히 2·28민주운동이 4·19혁명으로 계승된다는 취지에서 전개된 연구에서도 학생운동의 전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다보니 고등학생의 현실 인식과 참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2·28민주운동 이후 전개된 4월혁명기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1) 이에 대해서는 김일수의 연구를 비롯한 다음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김일수, “2·28의 4·19민주운동으로의 계승”, 『2·28민주운동사 I 사론편』,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00; 석원호, “제2장 대구경북의 4월혁명”, 『지역에서의 4월혁명』, 정근식·권형택 편, 서울: 선인, 2010; 허중, “4월혁명기 대구지역 대학 학생운동의 양상과 성격”, 『대구사학』, 141, 대구사학회, 2020; 김일수,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2) 허중, 위의 논문, 2020, p.227.

당시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2·28민주운동을 자발적으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촉발된 4·19혁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4·19혁명 이후 전개된 4월혁명기 민주주의 실현과 진보적 사회개혁을 위한 제반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 4월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정치적, 사회적 참여 활동을 분석하여 2·28민주운동을 주도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활동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2·28민주운동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 초봄에서 1961년 늦봄까지 지속되는 4월혁명기에도 지속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실천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의 주요 일간지와 『대구일보』, 『영남일보』, 『대구매일신문』 등 지역의 주요 일간지, 그리고 4월혁명에 앞장섰던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당시의 교우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자료집에서 누락된 당시의 기사를 일부 참조하였다.<sup>3)</sup> 1960년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학교에서 발행한 교우지에 실린 학생들의 글을 통해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현실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교우지를 발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대구지역 고등학교의 교우지는 4종이다. 그것은 1960년 9월 20일 발행된 경북고등학교(이하 경북고)의 교우지 『경맥』 제7호, 1960년 12월 25일 발행된 대구고등학교(이하 대구고) 교우지 『달구』, 1960년 12월 30일 발행된 대구상업고등학교(이하 대구상고) 교우지 『상훈』, 그리고 1961년 2월 23일 발간된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하 경대사대부고) 교우지 『군성』이다.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을 연구한 안도현·변영학은 이들 4종의 교우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논단 26편, 시 50편, 수필 35편, 소설 16편, 희곡 2편, 영화 시나리오 1편, 번역문 3편, 기행문 6편, 평론 4편, 기타 18편 등 총 161편의 학생들의 글이 실려 있음을 밝혔다.<sup>4)</sup>

본 연구는 먼저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을 민주주의와 4월 혁명에 대한 인식, 경제문제와 농촌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단상황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어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실천을 기존 학계에

3)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사Ⅱ 자료편』,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00.

4) 안도현·변영학,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 연구 -2·28민주운동 직후 발행된 교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1(3), (재)대구경북연구원, 2022, p.4.

서 2·28민주운동의 발발부터 5·16군사정변 직전까지를 4월혁명기로 보면서 주요한 요구와 전개된 운동의 내용, 그리고 정권의 대응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한 것에 따라 시기를 구분해 살펴본다. 세 시기는 2월 28일 2·28민주운동의 발생에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사퇴까지의 ‘4월혁명 발생기’,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서 7월 29일 총선까지 다양한 민주운동이 전개된 ‘4월혁명 성장기’, 그리고 7월 29일 총선 이후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 발발 이전까지 민주운동이 성장하고 통일운동이 전개된 ‘4월혁명 고양기’이다.<sup>5)</sup>

## II.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

### 1. 민주주의와 4월혁명에 대한 인식

2·28민주운동을 일으키고 4월혁명기 진보적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은 민주주의 실현이 있었다.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은 2·28민주운동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세상으로 인식하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억압당하는 독재의 시대로 인식하였다. 이는 2·28민주운동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김태일이나 채장수가 이미 지적하였고, 이후 관련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다. 김태일은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추구한 기본적 가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으며,<sup>6)</sup> 채장수도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sup>7)</sup> 물론 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인식은 2·28민주운동을 일으킨 대구지역 고등학생들만 공유한 인식이 아니라 당시 4월혁명에 참여한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유한 것이었다. 김선미는 4월혁명기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인식을 분석하면서 학생들은 “정권의 비리와 선거 부정 및 학원의 정치도구화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만연한 부정부패와 권력층의 전횡 등 정권의 부도덕성과 정치적 난맥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총체적 거부감”을 표출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했다고 하였다.<sup>8)</sup>

5) 석원호, 앞의 논문, 2010, pp.38-39.

6) 김태일, “4월 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pp.245-246.

7) 채장수, “2·28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대한정치학회보』, 11(3), 대한정치학회, 2004, pp.128-129.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대사대부고 학생 최용호는 “독재의 시공창에서 국민의 입은 틀어 막혔고, 국민의 귀는 뻗질되었고, 국민의 손발은 여지없이 묶이게” 되었다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 어떤 정치적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당시의 비민주적 상황을 지적하였다.<sup>9)</sup> 경북고 학생 이대우는 “말없이 걸어가는 이 나라 대중들의 발자국에는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독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반항과 독재의 검은 그늘에서 이 나라 민주의 피를 빼는 흡혈귀들에 대한 누적된 원한이 자국마다 고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울려 나오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아침밥을 굶고 무명웃이나마 제대로 얻어 입지 못하는 불쌍한 서민들의 입으로부터 끝없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에 대한 저항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음을 지적하였고, “더욱이 세기에 보기 드문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국민은 입과 귀를 틀어막히운 채 보안법이라는 법선에 뽕뽕 묶여 있었다”며 보안법을 통해 자유가 억압당한 당시의 현실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주의의 문제를 “일부 특권층을 위한 여당의, 여당을 위한, 여당의 전매특허적 민주주의”라 비판하였다.<sup>10)</sup>

대구고 학생 손진홍은 3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 강제로 동원되는 민중들의 모습을 “자유당 강연장인 수성천변으로 끌려가는 민중들이 골목마다 거리마다 짝 차 있었다”고 표현하면서 불공정한 부정선거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었다.<sup>11)</sup> 경대사대부고 학생 박재철은 “민주주의의 씨는 짝은 났으나 ..... 뿌리를 박지 못하고 부지런한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즉 새 역사 창조의 임무를 맡은 이 정권은 생명이 깃들인 이 가냘픈 새싹을 몰라보고 ..... 말살해 버릴려고 심히 노력했는가 하면 ..... 잘라 버렸으니”<sup>12)</sup>라며 이승만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한 상황을 묘사하였으며, 대구상고 학생 양제열은 이승만 정권을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4월혁명을 “흙속에 깊이 파묻힌 민주주의의 씨앗이 발아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묘사하였다.<sup>13)</sup> 이처럼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당시의 현실을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지 못하는 억압된 상황으로 보았고, 2·28민주운동과 4월혁명을 억압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8) 김선미, “4월혁명 시기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현실인식과 실천”, 『한국민족문화』 5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p.114.

9) 최용호, “군성회 운영의 1년 회고”,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p.14.

10) 이대우, “내일을 위한 투쟁”, 『경맥』, 7, 경북고등학교, 1960, pp.35-37.

11) 손진홍, “부정에 항거하는 젊음들”, 『달구』, 창간호, 대구고등학교, 1960, p.99.

12) 박재철, “역사의 전환점-2.28을 중심으로”,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p.103.

13) 양제열, “후배에게 주는 글”, 『상훈』, 7, 대구상업고등학교, 1961, p.193

인식하였다. 이런 인식을 가진 고등학생들은 2·28민주운동을 “불합리한 혼돈과 완미한 전체집정에 우롱되어온 빈사의 민주주의의 일각인 일요등교지시에 정면 항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원자유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규모로 직접 행동에 나섰던” 운동으로 기록하였다.<sup>14)</sup>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학생들의 열망과 인식은 4월혁명기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1961년 2월 28일 대구시내 31개교 중·고등학생 약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28민주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과제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대우는 “제2공화국의 오늘은 무엇이 자유당 횡포정권과 달라요. 꼭 같아요. 국가대사야 어린 우리로써 알 바 없지만 피는 감투 만드는 연장이 아니예요. 또다시 과거의 분노를 가슴속에 품어야 하다니”라며 2·28민주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이 장면 정권 아래서 훼손당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sup>15)</sup>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고등학생들은 “2·28의 분노는 권력을 탐욕하는 기성부패 정치인에 바쳤던 재물이 아니었다. 우리는 빈곤과 궁핍에 허덕이는 숨막히는 이 현실과 반식민지적 경제상태와 양대 진영의 냉전적 희생물로 제공된 민족분열의 비극을 시정해야 한다. 우리는 빈곤과 궁핍에 해방되어 평화와 행복을 찾는다”<sup>16)</sup>고 선언하고 “정의와 진리, 자유와 행복은 우리들 젊은 학도의 생명의 태양이며 불의와 부정, 억압과 착취, 예측과 추종은 젊은 양심의 적이다. 젊은 대구의 학도들은 2·28의 거 정신을 되살려, 역사적 과정을 엄숙히 다짐한다. 젊은 청년학도들은 민족의 햇불이오, 세대의 태양임에 대구학도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에 정의와 진리로써 용감히 매진할 것”을 순국선열 및 4·19영령 앞에 선사했다.<sup>17)</sup> 또한 학생들은 민의원, 참의원 의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제2공화국 수립 후 4·19민주운동이 성과없이 지나가고 경제는 어려워지며, 민족의 지상과업인 민족통일이 지연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고, 또한 한미간에 진행 중인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담았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sup>18)</sup>

4월혁명기에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4월혁명을 추동하는 선봉이었고 그들 앞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지역의 언론에서는 “4월혁명을 스스로 수행하여 오늘의 제2공화국을 있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신생공화국의 굳건한 터전을 닦기 위

14) 편집부, “2·28 경과 상보”, 『경맥』, 7, 경북고등학교, 1960, pp.41-49.

15) 『영남일보』 1961년 2월 28일.

16) 『매일신문』 1961년 3월 1일.

17) 『영남일보』 1961년 3월 1일.

18) 『매일신문』 1961년 3월 1일.

해서 가까이는 학구생활이나 학생풍기에서 멀리는 새로운 사회기풍을 확립하는 데 이르기까지 4월의 영웅다운 실천적 행동이 있어야 할 것”<sup>19)</sup>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 현실 참여와 실천 활동을 격려했고, “학생들은 아직도 4월혁명의 위업을 완수하는 데 즐기찬 앞장을 서야 하는 것”<sup>20)</sup>이라며 학생들에게 4월혁명의 위업을 완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자신들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4월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실천에 앞장섰다.

## 2. 경제문제와 농촌문제에 대한 인식

당시 한국사회가 아직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농업사회이기도 했지만,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어서 그들은 농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방학 때면 농촌계몽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각종 글에서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개탄했으며,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농촌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혁하고자 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제문제를 지적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당시 고등학생들의 눈에 비친 농촌의 현실은 비참했고, 농민의 삶은 고단하기만 했다. 경북고 학생 이대우는 당시의 열악한 현실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울려 나오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아침밥을 굶고 무명웃이나마 제대로 입지 못하는 불쌍한 서민들”로 묘사하였고,<sup>21)</sup> 대구고 학생 손진홍은 열악한 형편에 놓여있는 농어촌 동포들의 참상을 “폴뿌리 나무껍질로 근근히 실낱같은 생명이나마 부지해보려고 모진 고생을 달게 받으며 세월만 원망하는” 것으로 묘사했다.<sup>22)</sup> 경대사대부고 학생 김관희는 가난하고 곤궁한 농촌의 현실을 “내 손으로 피땀흘려 지은 쌀은커녕 잡곡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없고 춘궁기가 되면 의례히 나물죽과 송진떡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로 묘사하였다.<sup>23)</sup>

대구상고 학생 우문중은 당시 경제 상황을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불균형의 조장과 부패가 누적되어 왔고 ..... 막대한 외국의 원조를 소비재 도입에 급급하여 생산구조의 뒷받침 없는 국민의 소비수준을 높여 ..... 2백만 명의 실업자가 직장없이 헤매이고 농민들은 1년 내 피땀흘려 일을 하고도 춘궁기에는 절량농가의 속출을 면치 못한다”고 진단하였

19) 『매일신문』 1961년 2월 28일.

20) 『대구일보』 1961년 2월 28일.

21) 이대우, 앞의 논문, 1960, p.36.

22) 손진홍, 앞의 논문, 1960, pp.100-101.

23) 김관희, “자연의 품에 안기자”,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pp.87-88.

다.24) 그럼에도 당시의 정부는 농민의 삶을 개선하고 농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경대사대부고 학생 황시연은 우리나라 농업의 영세성과 낮은 영농방법을 지적하며,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고, 게다가 농한기마다 닥치는 계절적 실업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데도, 농토의 개발이나 농한기의 실업을 극복할 정부의 투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업을 “기형적이며 증가일로에 있으며 장기화하고 있고 대규모적이다”라고 진단하며, 우리나라는 해방 후 귀국한 교포, 한국전쟁 때 월남한 동포, 한국전쟁 후 귀향한 제대 군인,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시설, 농촌의 핍박으로 이농한 농업노동자 등과 같은 특유한 조건 때문에 실업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그 해결책으로는 자본의 축적, 미개발지의 개척과 농촌경제의 건전화, 실업 보장제도의 확립, 노동 급여책(공공사업) 실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방산업의 개발, 직업 교육의 실시와 직업소개소의 증설, 합리적인 노동조합의 운영, 이민정책의 수립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25)

대구고 학생 이성희는 농촌에서 봄이면 절량농가 문제, 가을이면 입도선매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어 농민들은 최저한도의 생활유지에 급한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나라 농정은 농산물 가격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잘못 추진되었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해결 방안으로 “진실로 농민을 위하여 헌신할 많은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가능한 한 농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책정할 수 있게” 하고, “농과출신의 학도들이 우량종자를 개량하고 파종 기술을 개선하여 생산고를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우리 대한의 학도들은 농촌을 부흥하기 위하여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학도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26)

이처럼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은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농촌계몽운동은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인 동시에 뜻깊은 일”27)이라며 청년학도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비참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방학 때마다 농촌계몽활동에 참여했다.

### 3. 분단상황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4월혁명기 민주화운동의 중심 의제는 통일이었다.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이 붕

24) 우문중,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논함”, 『상훈』, 7, 대구상업고등학교, 1960, pp.30-34.

25) 황시연, “한국 실업 실태 소고”,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pp.18-25.

26) 이성희, “농촌의 실태와 농정에 관한 분석”, 『달구』, 창간호, 대구고등학교, 1960, pp.63-71.

27) 김달이, “농촌 계몽운동을 다녀와서”, 『상훈』, 7, 대구상업고등학교, 1961, p.41.



괴되자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요한 통치수단으로 활용한 이승만 정권에서 억압의 대상이었던 통일 논의가 새롭게 분출된 것이다. 당시 통일 의제는 민족적 유대감의 발현이기도 했지만 경제문제의 해결 방법이기도 했다.<sup>28)</sup> 이시기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도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가 분단에서 비롯되었으며, 후진성 극복과 자립 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참여하였다.<sup>29)</sup>

당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과제가 남북통일이라고 하면서 남북 적대 의식을 형제적, 민족적 의식으로 전환해 대외적으로 민족의 통일된 의사를 발표하여 국제여론을 일으키고 대내적으로 범민족운동을 전개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달성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남북 인사교류에 소극적인 제2공화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남북한 인사교류는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민족적 관심과 단결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면서 남북교류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한 교역에 부정적인 제2공화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한 민족적 관심을 고취하고 동족 간의 질서와 반목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경대사대부고 학생 정기수는 기행문에서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산야가 어찌면 그렇게도 벌거숭이이며 초라한지 새삼스럽게 느낀다”하며 전쟁 이후 벌거숭이가 된 조국 강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내 조국을 두루 방문하여 옛 조상들이 남긴 유적을 더듬는 것도 얼마나 뜻있는 일인가 생각하니 양분된 조국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라면서 분단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sup>30)</sup> 같은 학교의 김용섭은 “민족을 알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기막힌 현상에 애태우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는 슬슬 눈치만 보면서 자기네의 이익에 맞지 않는 통일을 아예 문제시하지도 않는 잔재주 부리는 친구들이 많으니 한심한 일이다. …… 잔재주꾼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가슴속에서 타오른다”라며 자기 이해관계를 앞세워 민족의 대의인 남북통일에 소극적인 사람들에 대한 민족적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sup>31)</sup>

대구고 학생 손진홍은 “민족주의가 어떻든 공산주의가 어떻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애국 애족의 이념에 입각하여 통일을 하고서 세계적인 입장으로 진전해야 한다.”라면서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달성하

28) 윤정원, “제2공화국 시기 대구지역 통일운동의 조직과 활동”, 『사회와 역사』, 108, 한국사회사학회, p.193.

29) 허종, 앞의 논문, 2020, p.227.

30) 정기수, “영주 부석사를 찾아서”,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p.160.

31) 김용섭, “호기기와 나”,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p.124.

여 세계적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sup>32)</sup> 같은 맥락에서 경대사대부고 학생 박재철은 제2공화국 이후의 정치 상황을 진단하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빈곤의 원인을 “민주 공산 양대 진영의 냉전”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또다시 “커다란 불행과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불안에만 떨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중대시기에 더욱 삼천만 민족이 한 민족정신 아래서 단합하여 우리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길을 찾는 데에 있어서도 2·28, 4·19때와 같이 선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통일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였다.<sup>33)</sup>

경대사대부고 학생 이복수는 “통일방안론 시비”라는 글에서 우리의 가장 절실한 과제가 남북통일이라고 하면서 남북 적대 의식을 형제의식, 민족의식으로 전환해 “대외적으로 민족의 통일된 의사를 발표하여 국제여론을 일으키고 대내적으로는 범민족운동을 전개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통일 문제만은 일반 정치 문제와 달리 더 높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하여 위협시하고 흥계니, 책략이니 하여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여 정당하다면 취사선택해야 하는 정도의 관용성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통일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sup>34)</sup>

경대사대부고 학생 장극두는 “통일방안”이라는 글에서 남북한 인사교류와 교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당시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면서 남북통일의 기반을 놓기 위해서는 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 화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민족을 위해서라는 점을 생각하고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자중해야 할 것이며 확고한 민족주의적인 양심적 태도를 갖추어주어야 할 것이다. .... 우리들이 남북 인사교류를 원하는 것은 꼭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실제로 통일에 대한 첫 단계의 실현이란 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재고(再考)에서 오는 민족의 단결을 바라는 마음, 곧 민족주의적인 생각도 그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 이것은(교역론은)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사교류를 자극시킨 민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또 이로 하여금 동족을 질시하는 반목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소멸시켜보자는 데 있다고 보고

32) 손진홍, “창조의 3년을 더듬으며”, 『달구』, 창간호, 대구고등학교, 1960, p.62.

33) 박재철, 앞의 논문, 1961, p.107.

34) 이복수, “통일방안론 시비: 각 주장을 중심으로”,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pp. 26-27.

싶다.”고 하였다.<sup>35)</sup> 이처럼 장극두는 남북한 인사교류는 북한의 주장을 꺾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민족적 관심과 단결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6)</sup> 또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남북한 교역에 부정적이었던 제2공화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한 민족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동족 간의 질서와 반목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남북통일을 우리의 가장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면서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달성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민족적 관심을 고취하고 동족 간의 질서와 반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인식을 가진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4월혁명 고양기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통일운동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였다.

### Ⅲ. 4월혁명기 고등학생들의 실천

#### 1. 4월혁명 발생기 고등학생들의 실천

4월혁명 발생기는 2·28민주운동에서 이승만 사퇴까지의 시기로 4·19혁명이 움트고 전개된 시기이자 냉전기 반공독재로 억압받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의 맹아가 싹트는 시기이다. 2·28민주운동으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승만의 반공독재정권에 파열구를 내었고, 그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3·8민주의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폭발하였다. 4월 19일을 계기로 전국적인 대학생 시위가 전개되었고, 4월 26일에는 교수단의 시위에 시민들까지 합세하게 되어 마침내 이승만의 사퇴 성명을 끌어내었다.<sup>37)</sup> 이 시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2·28민주운동의 발생기와 4·19혁명 전개기에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 1) 2·28민주운동의 발생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조직적 저항을 가장 먼저 전개한 것은

35) 장극두, “통일방안: 나의 관점”,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pp.35-36.

36) 안도현·변영학, 앞의 논문, 2022, p.17.

37) 석원호, 앞의 논문, 2010, p.41.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다. 1960년 2월 28일 교육 당국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열리는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대구 선거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등교를 지시하였다. 학교 당국은 일요일 등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갖가지 불합리한 이유를 제시했다. 기말고사 일정 변경, 단체 영화 관람, 토끼 사냥 등 이유도 갖가지였다. 일요일 등교 지시가 내려지자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그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시의 철회를 요구하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특히 2월 27일 오후에 경북고, 대구고, 경대사대부고 학생들이 경북고 학생회 부위원장이었던 이대우의 방에 모여 항의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하고 비상 연락망을 조직하고 결의문까지 작성했다. 그리고 2월 28일 대구지역 8개 국·공립고등학교에서 일요일 강제 등교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경북고 학생들을 비롯한 약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원의 정치도구화 반대’를 외치면서 경북도청을 향해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그것이 2·28민주운동의 시작이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sup>38)</sup>

고등학생들은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 유지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자각하면서 정권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이 때문에 3·15부정선거라는 전대미문의 막장 불법을 맞닥뜨리면서 비판의식은 더욱 고조되었고, 학생과 교사를 마구잡이로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현실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단순한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이승만 정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들의 시위는 의협심에 불타는 일회성 폭발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이에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공명선거를 요구하고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실천의 선두에서 헌신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이끌었다.

일요일 등교에 항의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시위 소식은 주요 일간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외신을 통해 세계적으로 보도되었다.<sup>39)</sup> 이날의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촉발제가 되었고, 정부·여당과 야당인 민주당 사이에 격돌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sup>40)</sup> 당국에서는 연행된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해마다 거행하는 3·1절 기념행사를 축소하는 등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지만,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2월 28일 당일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산발적이지만 그 후에서도 지속되었다. 29

38) 김노주 편,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민주운동』,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22.

39) 1960년 2월 29일자 미국의 *The New York Times*는 “Korean Students Demonstrate”라는 제목하에 “TAEGU, Korea, Feb. 28(AP)-More than 1,000 high-school students clashed with club-swinging policemen today in a protest demonstration against Sunday classes. About 150 were arrested.”라고 보도하였고, 일본의 *The Japan Times*는 같은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40) 오창균, “2·28민주운동의 전개과정”, 『2·28민주운동사1 사론편』,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00, p.109.

일에는 대구상고 학생들이 산발적 시위를 벌였고, 3월 1일에는 경북여고와 대구여고 학생 100여명이 대구시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sup>41)</sup> 이후 각 학교 주변에 대한 학교 당국과 치안 당국의 경계가 삼엄해졌다.<sup>42)</sup> 하지만 2월 28일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었다. 3월 5일 서울에서 민주당 선거연설회에 참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500여 명이 시위를 벌였고,<sup>43)</sup> 3월 8일과 10일에는 대전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sup>44)</sup> 3월 10일에는 수원과 청주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전개되었다.<sup>45)</sup> 3월 12일과 14일에는 부산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서울, 인천, 포항 등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다.<sup>46)</sup>

3월 15일 선거가 있는 날 마산에서 시위가 발생해 고등학생들이 경찰의 발포에 희생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월 11일에는 3·15의거 때 행방불명된 김주열 학생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자 마산에서 2차 시위가 폭발했다. 대구에도 3·15의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3월 27일 민주당에서 3·15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감행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좌절되었다.<sup>47)</sup> 경찰 당국은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경계에 나섰고, 일부 학생에 대해 형사가 미행까지 감행하였다.<sup>48)</sup> 교사들은 학생들의 데모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감시하였다.<sup>49)</sup> 일시적으로 시위가 잠잠해졌지만, 4월혁명의 기운은 이미 전국의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2) 4·19혁명과 이승만의 하야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시위가 연일 발생했다. 4월 19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위를 벌인 것은 경북대학교였다. 경북대는 오후 2시 30분 무렵 단과대 단위로 집결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들어가, 시내 중심가에서 선거 재실시, 학생 인권 옹호, 민주주의 수호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저녁에는 청구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저녁 7시 20분 무렵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하여 부정선거를

41) 『조선일보』 1960년 3월 2일; 『마산일보』 1960년 3월 2일.

42) 『대구매일신문』 1960년 3월 2일.

43) 『대구매일신문』 1960년 3월 5일.

44) 『대구매일신문』 1960년 3월 11일.

45) 『동아일보』 1960년 3월 11일.

46) 『영남일보』 1960년 3월 16일.

47) 신현국, “2·28학생 데모와 영일 재선거 경위서”, 『2·28민주운동 60년 제2권 2·28민주운동 자료집』,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pp.273-274.

48) 『동아일보』 1960년 3월 17일.

49) 『동아일보』 1960년 3월 26일.

규탄하고, 선거 재실시를 요구하며 중앙로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의 시위가 전개되자 대구에서도 19일 오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20일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하지만 20일에도 대구대와 경북대, 청구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경북대 의대 학생들은 삼덕동 2군사령부 앞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sup>50)</sup>

4월 20일 이후 비상계엄령과 휴교령으로 시위가 어려워지자 학생들은 시위 희생자를 위한 모금과 채혈 활동을 벌이고, 요구 사항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도 4·19희생자에 대한 위문활동을 벌였다. 경북고는 위문금 모금을, 대구여고는 구호함 활동을, 대구공고는 위문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sup>51)</sup> 4월 26일 다시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경북대 교수단 백여 명은 학생들의 희생에 보답하자고 오후 12시 30분부터 경북대에서 동인로타리를 거쳐 반월당까지 평화적 행진을 전개하고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반월당에서 교수단이 해산하자 그 뒤를 따르던 경북대 학생 3백여 명이 플래카드를 인계하여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 도중 이승만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중·고등학생과 소년 등 학생들과 시민들도 시위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sup>52)</sup> 이날 저녁에는 시위가 폭력화 양상으로 전개되어 자유당 정권의 지배도구 역할을 했던 3개 경찰서와 대부분의 파출소, 자유당사 및 반공청년단 사무실, 신도환 의원 집 등이 파괴·방화되었다. 도지사·경찰국장과 시장관사는 물론 내외방직 공장과 사장 집도 파괴·방화로 피해를 입었다.<sup>53)</sup> 이런 파괴행위는 성인들보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에 의해 주도되었다.<sup>54)</sup> 그만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현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괴리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인 4월 27일 대구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표 40여 명은 계엄사령부를 찾아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술선수범을 약속하고, 학생자치치안반을 조직하였다.<sup>55)</sup> 사대부고 학생들은 “이제는 건설이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했고, 대륜고등학교 학생들은 파괴된 중앙파출소에서 청소활동을 펼쳤다.<sup>56)</sup>

50) 허중, 앞의 논문, 2020, pp.5-6.

51) 『대구매일신문』 1960년 4월 26일; 『대구일보』 1960년 4월 26일.

52) 석원호, 앞의 논문, 2010, p.45.

53) 『대구일보』 1960년 4월 27일; 『영남일보』 1960년 4월 27일; 『대구매일신문』 1960년 4월 27일.

54) 『영남일보』 1960년 4월 27일.

55) 『대구일보』 1960년 4월 27일.

56) 『대구일보』 1960년 4월 29일.

## 2. 4월혁명 성장기 고등학생들의 활동

4월혁명 성장기는 이승만의 사퇴에서 7·29총선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전국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 혁명의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구지역에서는 이승만의 사퇴 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과 개헌 요구 투쟁을 시작으로 교원노조 운동을 비롯한 노동운동,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투쟁인 피학살자유족회운동 등이 전개되었다.<sup>57)</sup> 이 시기 고등학생들은 지역에서 전개된 다양한 운동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이 중심으로 전개한 활동은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자치학생회를 조직하는 활동과 독재정권에 결탁한 어용교사를 축출하고 부패한 학교재단을 정화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원민주화운동과 4대국회 해산 요구와 부정선거원흉 처단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 1) 학원민주화운동

#### (1) 학도호국단 해체와 자치학생회 건설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전개된 4월혁명 성장기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무엇보다 먼저 학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그것이 바로 관제 동원과 학원 통제의 장치였던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학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학생회 조직이었다.

학도호국단은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이 정권유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반공 통치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 만든 학생조직이었다. 정부는 학도호국단 조직을 통해 학생들을 1953년 휴전반대 쫓기대회, 1954년 미군철수 반대 데모, 1957년 미군 감군 반대 데모, 1958년 제일교포 북송반대 데모 등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각종 쫓기대회와 집회에 동원하였다. 이미 『대구매일신문』의 주필 최석채는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을 통해 정치적 필요에 의한 학생 동원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sup>58)</sup> 2·28민주운동 발생 직후 언론에서는 학도호국단이 학원의 자유와 자치를 억압하는 장치임을 지적하면서 “학원의 자유와 학생들의 창의적 자발적 자치활동을 제약하고 학생운동을 획일화하려는” “학도호국단은 발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59)</sup>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학생들은 스스로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자치학생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1960년 5월 3일 국무회

57) 석원호, 앞의 논문, 2010, p.49.

58) 『대구매일신문』 1955년 9월 13일.

59) 『영남일보』 1960년 3월 13일.

의를 통해 학도호국단의 해체를 의결하였고, 10일에 대통령령 제1573호를 통해, 1949년 9월 대통령령 제186호로 제정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하면서 시행해 왔던 ‘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을 폐지하였다. 자치학생회는 학원의 자주성 확보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체로 인식되어<sup>60)</sup> 5월부터 대구의 각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의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자치학생회를 구성하였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의 학도호국단을 이끌던 인물을 대신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 자치학생회를 구성하였다.<sup>61)</sup>

경대사대부고 자치학생회인 ‘군성회’ 회장 최용호는 4월혁명 이후 “학원의 자유가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전국의 학교는 학원의 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경북사대부고에서도 “독재체제의 일환인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 우리의 자치기관인 군성회”를 조직했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특히 학도호국단 시대와 달리 학생자치기관의 총예산을 완전히 학생이 관장하게 되면서, “비교적 자유롭고 학생들의 창의로 집행할 수가 있어서 자치력의 신장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학생자치회 활동의 의미를 부여했다.<sup>62)</sup> 경북고 김영수는 학원이 “집권당의 간섭과 명령에 적극 좇아야만 했고 그러므로서 정치의 아부장이 되어 어용학자와 사이비 교사들이 우글거리는 역경에서 부패만을 거듭했던” 원인이 학도호국단 때문이었다며 “민주학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 학도호국단을 탈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자치 정신에 입각한 우리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자치조직”으로 새로 건설된 경북고등학교 학생회는 “외부의 어떠한 강제와 정치적 세력에도 굴종하지 않고 일절 이를 배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개성과 자유로운 창달과 자치능력의 배양을 기(期)하여 본교와 국가사회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실천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자치학생회 건설의 의의를 밝혔다.<sup>63)</sup>

이후 각 학교에서는 자치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였다.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주임들이 「대구시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결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과거 보도위원회처럼 하향식 지도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sup>64)</sup> 대구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치학생회를 구성하여 학원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60) 김일수, 앞의 논문, 2021, p. 965.

61)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1일; 『영남일보』 1960년 5월 1일, 3일.

62) 최용호, 앞의 논문, 1961, pp.14-16.

63) 김영수, “경북고등학교 학생회 규정”, 『경맥』, 7, 경북고등학교, 1960, pp.77-79.

64) 『영남일보』 1960년 12월 1일.



## (2) 어용 교사 축출과 부패재단 정화

자치학생회를 구성한 학생들은 학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버팀목이 된 어용 교사를 축출하고 부패재단을 정화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원이 정권에 예속된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말과 행동으로서 반공 이념을 강화하고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찬양하면서 사회현실의 왜곡과 구조화에 일조하였다. 학원에서의 어용 교사를 추방하고 독재정권에 기생한 부패재단을 정화하는 활동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청산하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있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사립학교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사립학교 재단의 부패 및 부정은 해방 이후 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허술한 학교 설립인가 조치를 악용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학교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 경우가 허다하였고, 정관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재단 운영 및 학원 운영을 즉별 체제로 하거나 사기업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이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구일보』는 사설에서 “학교교육이 재단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해서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사기업화하는 경향으로 흘렀고” “사립학교의 교원들은 사기업체의 고원 노릇밖에 할 수 없어 한갓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불과한 일을 해왔을 뿐”이라며 그 해결책은 “사립학원의 정화의 길” 뿐이라고 했다.<sup>65)</sup>

어용 교사를 척결하고 부패재단을 정화하기 위한 분규는 오성고등학교, 영신중·고등학교, 영남중·고등학교, 경북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성광중학교, 능인중·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하였다. 4·19혁명 이후 발생한 경북도내 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등 교사를 배척하는 학원 분규는 모두 32건에 달하였는데, 대부분 3·15부정선거 및 학원 운영권의 부정, 부당한 인사이동 등이 원인이었다.<sup>66)</sup> 학원민주화를 위한 어용 교사 축출과 부패재단 정화 운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학교는 오성고등학교와 대구사범학교였다.

1960년 5월 12일 오성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원의 기업화 배척”, “4형제 독재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정치에 가담해 학원을 기업화하고 비민주적 비교육적 행위를 한 교장 이영성, 교감 이우성, 재단 이사장 이주성, 교사 표찬수와 김현철 등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sup>67)</sup> 이에 교사들도 ‘학원의 모리화, 학원의 정치화, 비민주적 학교 운영, 비교육적 자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학생 농성에 동참하였다. 이

65) 김일수, 앞의 논문, 2000, pp.129-130.

66) 『매일신문』 1960년 10월 6일.

67)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12일.

에 학교 당국은 직원 명의로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시 휴교를 단행하며 강경히 대응하였다. 학교 당국의 조치에 반발한 학생들은 급기야 교장 사택에서 사퇴 농성을 벌이면서, 집안의 가재도구를 모조리 들어내며 강력히 대항하였다.<sup>68)</sup> 오성고등학교의 어용 교사 축출 및 부패재단 정화 운동은 사친회와 학부형이 법원에 재단이사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고, 교원노조가 계엄 당국을 방문해 교장의 즉각 사퇴 및 재단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락되었다.<sup>69)</sup>

대구사범학교의 학원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이 1960년 8월 부산에서 전근해 온 표광호 교장의 어용적 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조사학생대회를 열어 표광호 교장이 3·15부정선거 당시 부산시내 남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정선거에 참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때문에 표 교장은 밀양농림고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대구사범학교로 발령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은 교장 축출 활동을 벌였고, 이에 동조한 동교 사친회와 교사들도 문교부에 12월까지 교장을 경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동교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문교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학생들이 1961년 3월 20일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학생대회를 개최하고 수업거부를 결의함으로써 분규가 재연되었다.<sup>70)</sup> 이에 대구사범학교는 졸업생이 없는 졸업식을 진행하였고 결국에는 임시 휴교령을 취하였다. 동창회, 기성회, 사친회 대표들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교부장관을 만나, 3월말 인사이동시 교장을 경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대구사범학교 교장 축출 활동이 매듭지어졌다.<sup>71)</sup>

## 2) 정치개혁 운동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직후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제1공화국에서 결성된 제4대 국회가 개헌할 자격이 없으므로 국회를 해산하고 먼저 선거를 통해 국회를 새로 구성한 다음에 개헌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1공화국에서 구성된 4대 국회도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으므로 개헌 자격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5월 2일 시작되었다. 경대사대부고 학생 8백여 명, 대건고등학교 학생 7백여 명, 대륜고등학교 학생 4백여 명, 대구상고 학생 8백여 명 등이 각 학교 교문을 나서 시내 중심가를 돌며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인

68)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14일, 18일.

69) 김일수, 앞의 논문, 2021, p.967.

70) 『대구일보』 1961년 3월 21일.

71) 『대구일보』 1961년 3월 22일, 23일; 『영남일보』 1961년 3월 21일; 『매일신문』 1961년 3월 22일.

3일에도 대구농업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 능인고등학교 및 대구공업고등학교 학생 2천여 명, 대구여자고등학교 학생 7백여 명 등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어서 오성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중앙상업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 원화여자중·고등학교, 대구여자중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의 학생들도 “4대 민의원 총사퇴”, “3·15부정선거에 관여한 악질 관리의 처단 요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해산 시위를 벌였다.<sup>72)</sup>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과 달리 경북대를 제외한 대구 시내 4개 대학 대표자들은 국회 결의인 ‘선개헌 후선거’ 원칙을 지지하면서 중·고생들의 입장과 대립하였다. 5월 3일 청구대, 대구대, 계명대, 효성여대 등 대학생 대표 7명은 경북도청 상황실에서 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고등학생들의 국회해산 시위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주장하는 “선국회해산 후개헌”에 대해 “지금 국회가 해산하면 혼란기를 못 면한 때에 입법부의 공백 상태로 더욱 혼란이 조장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의 순수한 행동이 일부 정당에 이용되기 쉬운 점이 없지 않다”며 “선개헌 후선거”를 주장하였다.<sup>73)</sup>

대구지역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개헌과 국회해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시내 중·고등학생들은 대구지구 계엄사무소측의 주선으로 5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55개교 학생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중·고등학교학생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학생대표들은 국회해산 시위를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은 “부패한 현국회에 개헌을 맡길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과 대중 결의를 통해 선전 활동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였다.<sup>74)</sup>

다음날인 5월 4일 경북도청 상황실에서 55개 공·사립 중·고등학교 대표와 5개 대학 대표가 참여하는 “시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자 회의에 대학생 대표자가 결합한 일종의 확대 학생대표자회의인 이날 회의에 72명의 학생대표가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대표들과 대학생 대표들은 격렬한 토의 끝에 “선개헌 후선거” 안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향후 행동을 통일하기 위한 단일 조직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sup>75)</sup> 대구지역 학생들의 이런 활동과 무관하게 4대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되면서 국회해산 시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7·29총선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5

72) 『영남일보』 1960년 5월 3일, 4일.

73) 『영남일보』 1960년 5월 4일.

74) 『대구일보』 1960년 5월 3일, 4일; 『영남일보』 1960년 5월 3일, 4일.

75) 『대구일보』 1950년 5월 5일.

월 21일 “학생의 본분을 이탈시키는 어떠한 불순세력도 배격할 것이며 편당 편파적 정치 도구화를 거부하고, 오직 정의와 진리에 충일한 4월혁명 정신과 유엔정신에 투철하여 다가올 모든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평온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 대학생 민주수호공명선거추진회’가 결성되었다.<sup>76)</sup> 6월 22일에는 경북대학교에 “다가오는 총선이 제2공화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4월혁명의 정신을 살려 선거계몽에 힘쓰겠다”며 경북대학교 ‘민주선거촉진 학생연맹’이 결성되었다.<sup>77)</sup> 대학가의 이른 흐름에 따라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도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국적으로 반혁명세력규탄 학생데모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26개 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의 12개 단과대학 학생들은 연합으로 7월 16일 대구역 광장에서 “반혁명인사규탄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총선거에 과거 자유당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입후보자로 나선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후보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었다.<sup>78)</sup> 7월 27일에는 수성천변에서 서울대 국민계몽대·경북대·대구대·청구대 등 4개 대학 주최로 “반혁명세력추출학생궐기대회”가 열렸다.<sup>79)</sup> 이러한 학생들의 반민주인사규탄 운동에 힘입어 7·29총선거에서 대구에서는 당선자 6명 가운데 5명은 민주당 후보, 1명은 사회대중당 후보였다. 구자유당 출신은 모두 낙선하였다.<sup>80)</sup>

### 3. 4월혁명 고양기 고등학생들의 활동

4월혁명 고양기는 7월 29일 총선 이후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 이전까지로 대중의 고양된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민중운동이 성장하고 통일운동이 전개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강력히 분출된 시기이다. 하지만 5·16군사정변으로 4월혁명이 갑자기 막을 내리면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반의 요구가 불법화되고 지하화되었다. 이 시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이전 시기부터 진행되던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을 지지하였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교사 반환 요구와 한미경제협정체결 반대와 같은 자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통일운동과 이대약법 반대 투쟁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76) 『조선일보』 1960년 5월 22일.

77) 『경북대학교보』 1960년 6월 27일.

78) 『조선일보』 1960년 7월 16일; 『동아일보』 1960년 7월 16일.

79) 『영남일보』 1960년 7월 28일; 『동아일보』 1960년 7월 28일.

80) 김일수, 앞의 논문, 2000, p.135.

## 1) 교원노조 운동 지지 활동

4월혁명기 교사들이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교원노동운동을 전개할 때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교사들의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학생들의 교원노동조합 합법화 투쟁 지지 활동은 9월경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그 활동은 주로 단식, 가두시위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승만 사퇴 후 개헌논의와 총선을 통한 정부의 교체가 예상되자, 대구의 교사들은 기존의 관제교육과 정권의 간섭으로부터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교육사상 최초의 교원노조를 설립하였다.<sup>81)</sup> 이승만 정권이 교육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교사들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4월혁명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함께 부채감을 갖게 되었다. 교사들은 4월혁명을 계기로 그동안의 방관자적 입장을 반성하고 교육자의 사명을 자각하고 학원민주화와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열망으로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sup>82)</sup>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들은 경북여고에서 대구시교원조합 발기인총회를 열고,<sup>83)</sup> 5월 7일 대구상고 강당에서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 교원 28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최초의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sup>84)</sup> 대구에서 시작된 교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문교부장관은 교원노조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6월 22일 보사부·문교부 장관은 교원노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원노조를 해체하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단위노조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였다.<sup>85)</sup>

6월 24일 경북교조는 대구역 광장에서 과도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을 비판하고 문교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sup>86)</sup> 정부의 탈퇴 종용과 파면 위협이 심해지자, 7월 11일 경북교조는 실력·법정 투쟁을 진행하고, 총선 시 교원노조문제를 쟁점으로 삼았다.<sup>87)</sup> 그럼에도 경북지사의 경북교조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8월 11일부터 도청 광장에서 나흘간 연좌시위를 벌였고, 14일에는 700여 명의 교원들이 경북지사의 사임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15일 쫓겨대회를 통해 극한투쟁 불사 결의를 천명하는

81) 석원호, 앞의 논문, 2010, p.57.

82) 임송자, “교원노조결성운동”, <https://dict.kdemo.or.kr/entry/94/>(검색일: 2023.05.20).

83) 『대구일보』 1960년 4월 29일, 30일, 5월 4일.

84) 이복,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서울: 푸른나무, 1989, pp.22-27.

85) 위의 책, pp.105-108.

86) 위의 책, pp.114-116.

87) 위의 책, p.119.

한편, 16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에는 달성공원에서 교사·시민이 모여 교원노조탄압반대 전국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8월 23일 장면 정권이 들어섬에도 정부입장에 변함이 없자, 25일 2,000여 명의 교원이 대구역 광장에서 모여 ‘총사퇴투쟁결행선언대회’를 열었다.<sup>88)</sup>

민주당 정부는 본질적으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하에 대한교련을 개편하는 한편, 9월 7일에 조합결성권만 인정하고 쟁의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월 8일 대구역 광장에서 교원 800여 명과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부는 교원노조의 합법성 천명을 촉구하는 대정부궐기대회를 열었다.<sup>89)</sup> 9월 26일 대구역 광장에서 교조불법화반대 집단농성·단식농성 결행선언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고등학생들의 교원노조에 대한 지원 투쟁이 시작되었다. 교원들은 저녁부터 집단 단식에 들어갔으며, 9월 27일에는 전국 교조원 단식으로 확산되어 9월 30일까지 84시간 동안 단식투쟁이 전개되었다. 참가자들은 9월 30일까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투쟁하면서 진행한 정상수업 중 단식으로 부상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교사들의 단식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분필을 쥐고 교단 위에서 쓰러져 가는 스승들의 모습을 이 이상 더 목과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대구 시내 곳곳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sup>90)</sup> 경북여고에서는 3학년 학생이 동교강당에서 단식투쟁을 벌였고, 경북고 학생 1,500명, 능인고등학교, 대구농업고등학교 학생들도 동조 단식투쟁을 벌였다. 대구상고 학생 1,800명은 대구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영남고등학교 학생 3,000여 명은 경북도청 앞에서 교원노동조합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구상고 학생들은 “스승없는 학도는 있을 수 없다”, “마비 상태의 학원과 쓰러져 가는 스승을 국회는 책임지라”, “쓰러진 스승을 투쟁으로 구출하자” 등의 결의 사항을 채택하고 시위에 돌입하였다.<sup>91)</sup> 28일 경북고, 경북여고, 대구상고 학생 시위와 농성 그리고 대구농고, 능인고 수업 거부에 이어 29일에는 대구상고, 영남중·고등학생 등 14,000여 명이 “스승 없는 학원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하고 대구역 광장에서 노천학습을 하는 등의 지원투쟁을 하였다.<sup>92)</sup> 결국 정부가 9월 2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하자 9월 30일 상오 6시를 기해 전국 교원노조원들의 단식이 중단되었다.

88) 위의 책, pp.152-157.

89) 위의 책, pp.168-170.

90) 『매일신문』 1960년 9월 29일.

91) 『매일신문』 1960년 9월 29일; 『영남일보』 1960년 9월 29일; 『대구일보』 1960년 9월 29일, 30일.

92) 『매일신문』 1960년 9월 30일, 『영남일보』 1960년 9월 30일.

## 2) 통일운동

4월혁명 고양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통일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통일운동에 동참하였다. 학생층의 통일논의는 1960년 9월부터 활발히 제기되었고, 10월 중순 대구대 정치학회 주최 통일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5회 학생토론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고등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통일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10월 22일 경북시국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족통일 경북고등학교 결성준비위원회도 결성되었다. 1961년 5월 3일 서울대민통련에서 남북학생회담이 제의되었고, 대구지역의 학생들은 5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학생회담 지지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3개 대학 및 2개 고등학교 학생대표를 각각 5명씩 선발해 파견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5·16군사정변으로 불법화되면서 중단되었다.<sup>93)</sup>

4월혁명 고양기 학생층의 통일논의가 1960년 9월 24일, 25일 양일간 고려대 전국대학생시국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된 가운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1960년 10월 중순 대구대 정치학회가 주최한 제5회 학생토론대회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이 대회에서 특등으로 선정된 경북고 김정호는 통일을 위한 정치노선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사회주의 노선에 대해 “조국과 겨레를 함께 묶어 줄 수 있는 것이며, 공산주의 자본주의라는 이 두 낡은 개념을 통일적으로 한 자리에 두고 이 두 개념을 모두 부정하고 폐기한 것 보다 고차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곧 그는 이데올로기가 분열의 최대 원인이기에 민주사회주의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인식은 3등을 차지한 협성상고의 김문구의 주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sup>94)</sup> 당시 민주사회주의는 혁신계 정치세력의 정치이념이었다. 혁신계는 민주사회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민주주의로 보았다.

대구지역에서 통일론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1960년 10월 22일 경북시국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11월 11일 경북대에서 민족통일촉진학생연구회가 결성되면서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때 경북고등학교에 민족계몽협회 지부가 활동하고 있었다. 민족계몽협회 경북고등학교 지부가 실시한 설문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선통일 후건설’이 55.9%, ‘선건설 후통일’이 40.1%로 나타났다. 당시 통일 문제에서 먼저 통일을 하자는 선통일론과 먼저 경제를 건설하자는 선건설론이 대립하고 있을 때,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먼저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 경제를 건설하자는 선통일론을 더 지지하고 있었다.<sup>95)</sup>

93) 김일수, 앞의 논문, 2021, p.982.

94) 『영남일보』 1960년 10월 20일, 21일, 22일, 23일.

95) 『경향신문』 1960년 11월 12일; 『동아일보』 1960년 11월 12일; 『조선일보』 1960년 11월 11일.

4월혁명 고양기 대구지역 통일운동은 2대 악법이 통일운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2대악법반대투쟁과 함께 진행되었다. 1960년 11월부터 1961년 3·1절 기념행사까지 통일운동은 경북민통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2대악법반대 경북정당 사회노동학생단체 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된 이후에는 2대 악법 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다.<sup>96)</sup> 이른 흐름에 따라 대구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민통련 지부가 결성되어 연합단체와 함께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경북고에서 ‘민통련 결성준비위원회’가 고등학교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되었다. 1961년 4월 21일 ‘민족통일 경북고등학교 결성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날 경북고 학생들은 선언을 통해 “자주성에 입각한 남북통일, 학생의 시대적 각성, 사회악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경북고 민통련 결성준비위원회의 결성을 계기로 대구시내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민통련 준비위가 결성되었다.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각 학교에 민통련을 결성한 목적은 “조국 통일에의 학구적 연구를 연마하여 민족과 조국번영에의 길을 기성정치인에 외람되나마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sup>97)</sup>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통일운동은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1961년 5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남북학생회담 지지 대회의 참가로 이어졌다. 대구지역 3개 대학 및 2개 고등학교 학생대표 각 5명씩 모두 25명이 서울 학생들의 남북한 학생교류 제의를 지지하기 위해 상경하기로 했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학생들과 사회단체가 만경관 앞 소개도로와 수성천변에서 남북학생회담 지지 대회를 개최하였다.<sup>98)</sup> 이어 경북고, 영남고 민통련계 고등학생들은 경북대, 청구대, 대구대 학생들과 함께 5월 13일과 15일에 연속적으로 남북학생회담 지지 대회를 열기로 계획하였다.<sup>99)</sup> 그러나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통일운동은 5·16군사정변으로 좌절되고 막을 내렸다. 5·16군사정변 세력이 혁명재판을 통해 인신을 강제하고, 정치사회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제2공화국 시기의 통일운동을 모두 불법화하였고, 진보적 정치·사회활동을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통일운동은 비합법운동으로 전환되어 그 맥을 이어갔다.<sup>100)</sup>

### 3) 자주화 운동

4·19혁명 시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교사를 반환하라는 운동과 불평등한 한미경제협정 체결 반대와 같은 자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96) 윤정원, 앞의 논문, 2015, pp.210-211.

97) 『영남일보』 1961년 4월 22일; 『조선일보』 1961년 4월 22일.

98) 『영남일보』 1961년 5월 10일.

99) 『경향신문』 1961년 5월 10일.

100) 윤정원, 앞의 논문, 2015, p.216.



이후 대구가 군사작전의 주요 지역으로 부각 되면서 군대가 학교 건물을 임시 주둔 시설로 사용하였다. 1953년 7월 정전회담 이후 군대 시설로 사용된 학교 건물은 대부분 원래 학교에 반환되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군대가 주둔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인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4월혁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진행되자 이런 학교에서도 교사 반환을 요구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sup>101)</sup>

대구에서 교사반환운동은 1960년 11월 29일 대구공고 학생들이 미군을 대상으로 교사 반환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구공고의 교사는 한국전쟁 중 미군에 징발되어 4·19 혁명이 발생한 1960년에 이르기까지 미8군 소속 16병기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정전회담 뒤에도 교사가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건물 교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4월혁명 고양기에 가건물 교사가 좁고 낡아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교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구공고 학생들은 교사반환 요구 결의문과 주한 미국 대사 매카나기와 권충돈 국방부장관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고, “가교사 다 헐었다. 본 교사를 돌려다오”, “운동장 없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 등의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학생들은 길거리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북도청에 이르러 이호근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교사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sup>102)</sup>

일부 학교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교사 반환 운동이 전개되는 중에 1961년 2월 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경제협정이 체결되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협정은 해방 이후 한미간에 맺은 여러 경제와 원조 관련 협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 하지만 협정 내용 중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제3조 1항 원조자원 사용에서 한국 정부는 미당국자들에게 사업 및 그 계획과 관계 기록을 제약 없이 관찰하고 재검토할 것을 허용한다는 것과 제6조 2항 미국 정부 또는 동정부에 의하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계약자가 본 협정에 의하여 사업이나 계획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입할 또는 한국 내에서 취득할 공급물자·원료·기구·물자 또는 기금은 원조사업에 관련되어 사용할 경우에만 면세조치를 한다는 것이 불평등조약 내지 내정간섭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지역언론에서는 사설을 통해 한미경제협정이 한국의 장기적인 예측을 의미한다거나 한미신경제협정은 참을 수

101) 김일수, 앞의 논문, 2021, p.971.

102) 『영남일보』 1960년 11월 30일.

없는 민족적 수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sup>103)</sup> 대구지역 학생들도 한미경제협정이 “한국을 반식민지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굴욕적인 협정이라 생각하고 결사반대하였으며, 2월 19일 혁신 정당과 진보적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한미경제협정경북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고 대신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2월 22일 대구역 광장에서 1천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는 시민권기대회가 개최되었다. 2월 28일에는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28민주운동 1주년 기념식을 마친 후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고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sup>104)</sup> 그러나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정부 당국은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족적 입장과 태도를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을 통해 억제하려 하였다. 한편 2월 28일 한미경제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은 동력을 상실하였다.<sup>105)</sup>

#### 4) 2대 악법 반대 투쟁

4월혁명이 한창 고양되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통일운동과 한미경제협정 반대 시위가 빈발하자 장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응하려 했지만, 그것이 어려워지자 ‘반공임시특별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하려 하였다. 이 두 법안은 장면 정권이 한미경제협정 반대와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학생 진영과 혁신 정치계를 압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 4·19혁명 이후 드러난 학생과 대중들의 민주주의 실현과 민족통일애의 열망과 학생 대중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악법이었다. 이에 학생과 진보적 정치세력은 두 법안을 통일운동을 포함한 진보적 사회운동을 탄압하려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지역 고등학생들 역시 2대 법안이 대중운동과 통일운동을 막으려는 ‘악법’이라는 인식하에 진보적 정치세력 및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벌였다.

2대 악법 반대 투쟁은 대구에서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부산·마산·광주·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61년 3월 13일 먼저 경북도의회가 두 법의 즉시 철회를 건의하는 대정부 및 국회 긴급 동의안을 가결하였고, 다음날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반공특별법 및 데모규제법반대경북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sup>106)</sup> 3월 18일에는

103) 김일수, 앞의 논문, 2021, p.973.

104) 『매일신문』 1961년 3월 1일.

105) 허중, 앞의 논문, 2020, p.247.

106) 『매일신문』 1961년 3월 14일, 15일; 『대구일보』 1961년 3월 15일.

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지역 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대악법반대경북학생주최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2대 악법뿐 아니라 자유당 독재의 유산인 보안법도 철폐하라”, “민주당 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학생들은 2대 악법을 “사상·집회·데모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제한 대한민국의 공포정치를 실시하려는 민주당 정부의 음모”로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겠다”던 민주당 공약을 상기시키면서 “자유당의 최후발악을 민주당은 벌써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처사를 통렬히 비난하였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데모로 세운 나라 데모로 막으려느냐”, “피로써 빼앗은 권리 총칼로 못 막는다”, “장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횃불 시위를 벌였다.<sup>107)</sup> 이날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2대 법안 저항에 당황한 정부는 3월 20일 각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고, 2대 법안 반대와 저항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sup>108)</sup>

장면 정부가 2대 법안 반대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3월 21일 ‘2대악법반대경북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하는 ‘2대악법반대시민궐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장정권이 2대 악법을 제정하려 드는 것은 그들의 무능과 부패를 엄폐하기 위한 것이며,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반공을 구실로 민주주의를 말살한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려 드는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또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모든 국민이 통일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쫓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2대악법반대시민궐기대회”를 여는 것이라 주장하였다.<sup>109)</sup> 24일에는 대구역 광장에서 2대 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 주최의 “반공법·데모규제법 규탄 시위”가 열렸다. 이 규탄 시위에서는 이승만과 장면의 결혼식을 이완용이 주례하는 가장행렬과 조재천 법무부장관의 가장 장례식이 치러졌다. 가장 결혼식의 주례를 대독한 대구사범학교의 위순목 학생은 “이승만의 일제 항쟁과 독립운동 경력은 진정한 애국자들을 배신한 매국적 운동이었음을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선량한 백성을 빨갱이로 몰아 영구집권을 꾀했던 그 극악성을 지탄한다고”고 주장하였다. 이어 대규모의 횃불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때 경찰당국이 시위 학생과 군중들에게서 관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시위의 정당성과 정부 당국의 탄압 반대 그리고 구속자 전원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sup>110)</sup>

107) 『매일신문』 1961년 3월 18일, 19일; 『대구일보』 1961년 3월 19일; 『영남일보』 1961년 3월 19일.

108) 『대구일보』 1961년 3월 20일.

109) 『영남일보』 1961년 3월 22일.

110) 『대구일보』 1961년 3월 24일, 25일.

이어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지역의 정당·사회단체, 노동단체 등과 공동으로 4월 2일 2대 악법 반대 쫓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sup>111)</sup> 4·2쫓기대회는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포함된 2대악법반대경북학생투쟁위원회를 비롯한 2대악법반대경북공동투쟁위원회, 2대악법반대노조연합투쟁위원회 등 3대 공동투쟁위원회 총연합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다. 특히 4·2쫓기대회는 대구역 사용 불허 방침을 세운 당국이 대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구역 및 시내 중심가에 경찰병력을 철통같이 배치함으로써 4·19 이후 대구에서 최대의 긴장이 조성되었다. 4·2쫓기대회 주최 측은 당국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강행하여 “반공이란 구실보다 배고프다 통일하여 살아보자. 노동자, 농민이여 일어서라. 학생들이여! 시민들이여!”라는 슬로건과 “국회는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경찰 당국은 2,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강제 해산시켰다. 그 과정에서 경찰 당국은 43명을 긴급 구속 처리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특히 경찰이 집회 불법 시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 간부 13명을 지명 수배하여 검거 작전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2대 악법 반대 시위는 구속 학생 석방 시위로 확대되었다. 대구시내 영남고, 협성상고, 경북고 학생들이 구속 학생 석방 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14일 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는 수성천변에서 2대 악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규탄대회에서 “① 장정권은 학원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을 중지하고 구속된 데모대원을 석방하라 ② 2대 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그 심의를 거부하라 ③ 4·19기념행사를 음모하기 위한 어용 4월혁명학생동지회는 해산하라 ④ 군인과 경찰은 민족과 부모 형제의 장래를 위해 민주주의 편에 서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백만 학도 잡아보라’, ‘어용 판사 물러가라’, ‘4·2민주투사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 날인 15일 대구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들과 대학 학생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4월혁명기념행사 학생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단결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법원 앞에서 어용 법관 퇴진, 대구경찰서 앞에서 구속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sup>112)</sup>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합투쟁조직을 결성하고, 2대 악법 반대 투쟁의 첫 포문을 열고, 가장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 학생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투쟁의 전국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4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2대 악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회기 내 처리를 거부하자 정부가 두 법안의 국회 상정을 포기하면서 2대 악법 반대 투쟁도

111) 김일수, 앞의 논문, 2021, p.981.

112) 『대구일보』 1961년 4월 15일, 21일; 『매일신문』 1961년 4월 15일, 21일; 『조선일보』 1961년 4월 15일.

막을 내렸다.<sup>113)</sup>

#### IV. 결론

이상에서 1960년 2·28민주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1961년 5·16군사정변 이전까지 전개된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민주주의 실현과 진보적 사회변화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실천을 살펴보았다. 대구의 4월혁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학생운동이라는 흐름 속에서 고등학생의 활동과 대학생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언급하였기에 당시 민주주의 실현의 주역이었던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실천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특히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2·28 민주운동이 4·19혁명으로 계승되었다는 취지의 연구에서조차 학생운동의 전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 고등학생의 현실 인식과 활동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였다.

1960년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2·28민주운동을 자발적으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4·19혁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4·19혁명 이후 전개된 4월혁명기에도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을 전개한 민주주의 실현과 진보적 사회개혁의 주도세력이었다. 그러므로 2·28민주운동을 주도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실천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4월혁명기 전개된 그들의 현실 인식과 실천까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1960년 이른 봄부터 1961년 늦은 봄까지 전개된 4월혁명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정치적, 사회적 실천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28민주운동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4월혁명 그 자체로 지속되었고, 2·28민주운동의 주역인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이 4월혁명기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주역이었음을 확인하였다.

2·28민주운동을 일으키고 이후 전개된 4월혁명기의 진보적 사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를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세상으로 인식하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억압당하는 독재의 시대로 인식하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이승만 정권하에서 극도로 억압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자각하고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당시 대구

113) 허중, 앞의 논문, 2020, p.252.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어서 농촌문제와 경제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방학 때면 농촌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농촌계몽활동에 참여하였고, 각종 글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의 농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시에 4월 혁명기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은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가 분단에서 비롯되었으며, 후진성 극복과 자립 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과제가 남북통일이라고 하면서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달성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 적대 의식을 형제의식, 민족의식으로 전환해 대외적으로 민족의 통일된 의사를 발표하여 국제여론을 일으키고 대내적으로 범민족운동을 전개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1960년 2월 28일 2·28민주운동 발생에서 4월 26일 이승만 사퇴까지 4·19혁명이 움트고 전개되면서 냉전기 반공독재로 억압받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의 맹아가 싹튼 4월혁명 발생기에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2·28민주운동을 일으켜 이승만의 반공독재정권에 파열구를 내었고, 4·19혁명이 전개될 때 대학생들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이승만 정권 퇴진의 한 축을 담당했다. 4월 26일 이승만의 사퇴에서 7월 29일 총선까지의 4월혁명 성장기에는 혁명의 공고화를 위한 전국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지역에서는 이승만의 사퇴 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과 개헌 요구 투쟁을 시작으로 교원노조 운동을 비롯한 노동운동,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투쟁인 피학살자유족회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고등학생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동참하였지만 그들의 활동 중심은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자치학생회를 조직하는 활동과 독재정권에 결탁한 어용교사를 축출하고 부패한 학교재단을 정화하려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원민주화운동과 4대국회 해산 요구와 부정선거원흉 처단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그리고 7월 29일 총선 이후부터 1961년 5월 16일 5·16군사정변 이전까지의 4월혁명 고양기에는 역시 사회운동의 전반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이 전개될 때 그것을 지지하는 투쟁을 하였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교사 반환 요구와 한미경제협정체결 반대와 같은 자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4월혁명 고양기 최대 이슈였던 통일운동과 2대 악법 반대 투쟁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이처럼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2·28민주운동을 일으켜 4·19혁명을 촉발했으며, 4월혁명이 계속되는 동안 민주주의 발전의 정체, 농촌문제와 경제문제의 산적, 그리고 시대적

과제와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보적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4·19혁명을 계기로 대학생이 학생운동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학생운동의 중심세력이었다. 그것을 4월혁명기 고등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실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에 진보적 사회운동이 억압당하고 80년대 이후 대학의 팽창을 통해 대학생이 학생운동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고등학생들은 사회운동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렇지만 한때 고등학생이 진보적 사회운동의 주역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폴리처상을 수상한 키즈 비치(Keyes Beech)는 1960년 봄 2·28민주운동 이후 발생한 한국의 학생 시위를 보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국의 ‘말 없는 세대’가 오랜 잠을 깨고 소생했다. 약 15년 전에 일본 경찰과 대립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sup>114)</sup> 그 학생들은 바로 고등학생들이었다.

## 참고문헌

-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사 II 자료편』,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00.
- 김관희, “자연의 품에 안기자”,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 김노주 편,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민주운동』,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22.
- 김달이, “농촌 계몽운동을 다녀와서”, 『상훈』, 7, 대구상업고등학교, 1961.
- 김선미, “4월혁명 시기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현실인식과 실천”, 『한국민족문화』 5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 김영수, “경북고등학교 학생회 규정”, 『경맥』, 7, 경북고등학교, 1960.
- 김용섭, “호기가와 나”,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 김일수,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_\_\_\_\_, “2·28의 4·19민주운동으로의 계승”, 『2·28민주운동사 I 사론편』,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00.
- 김태일, “4월 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 박재철, “역사의 전환점-2.28을 중심으로”,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 석원호, “제2장 대구경북의 4월혁명”, 『지역에서의 4월혁명』, 정근식·권형택 편, 서울: 선인, 2010.
- 손진홍, “부정에 항거하는 젊음들”, 『달구』, 창간호, 대구고등학교, 1960.
- 신현국, “2·28학생 데모와 영일 재선거 경위서”, 『2·28민주운동 60년 제2권 2·28민주운동 자료집』,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안도현·변영학,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 연구 -2·28민주운동 직후 발행된 교

114) *The Washington Post*, 1960년 3월 14일.

- 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1(3), (재)대구경북연구원, 2022.
- 양제열, “후배에게 주는 글”, 『상흔』, 7, 대구상업고등학교, 1961.
- 오창균, “2·28민주운동의 전개과정”, 『2·28민주운동사1 사론편』,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00.
- 우문중,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논함”, 『상흔』, 7, 대구상업고등학교, 1960.
- 윤정원, “제2공화국 시기 대구지역 통일운동의 조직과 활동”, 『사회와 역사』, 108, 한국사회사학회, 2015.
- 이대우, “내일을 위한 투쟁”, 『경맥』, 7, 경북고등학교, 1960.
-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서울: 푸른나무, 1989.
- 이복수, “통일방안론 시비: 각 주장을 중심으로”,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 이성희, “농촌의 실태와 농정에 관한 분석”, 『달구』, 창간호, 대구고등학교, 1960.
- 임송자, “교원노조결성운동”, <https://dict.kdemo.or.kr/entry/94/>(검색일: 2023.05.20)
- 장극두, “통일방안: 나의 관점”,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 정기수, “영주 부석사를 찾아서”,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 채장수, “2·28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대한정치학회보』, 11(3), 대한정치학회, 2004.
- 최용호, “군성회 운영의 1년 회고”,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 편집부, “2·28 경과 상보”, 『경맥』, 7, 경북고등학교, 1960.
- 허중, “4월혁명기 대구지역 대학 학생운동의 양상과 성격”, 『대구사학』, 141, 대구사학회, 2020.
- 황시연, “한국 실업 실태 소고”, 『군성』, 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961.

『경북대학보』 『경향신문』 『(대구)매일신문』 『대구일보』  
『동아일보』 『마산일보』 『영남일보』 『조선일보』

*The Japan Times*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 Abstract 】

**Perception and Practic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aegu Area during the April Revolution Period**

Byung Deok Choi

This paper examines the perception and political-social practic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aegu area during the April Revolution period. Th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aegu region during the April Revolution period not only spontaneously initiated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but also took a leading role in the consequent 4·19 Revolution that followed its lead. Furthermore, they actively contributed as key participants in the April Revolution period, working towards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progressive societal reform.

At that time, th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aegu area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that democracy needed to be realized. They also showed significant interest in rural and economic issues, analyzing their causes and seeking solutions. Moreover, they recognized that national unification was a prerequisite for overcoming the backwardness of Korean society and achieving economic self-sufficiency.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April Revolution, th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aegu area took a leading role by initiating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hich contributed to the fracture of Syngman Rhee's anti-communist authoritarian regime. When the 4·19 Revolution occurred, they collaborated with university students an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the Syngman Rhee government. In the growth phase of the April Revolution, they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in line with the nationwide movement to solidify the revolution. Key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aegu area included the democratization of private academies and political reform movements. Even during the later stages of the April Revolution, they remained central forces in social movements, supporting the legalization of the teachers' union, advocating

for the return of school buildings used by the U.S. military, opposing the ratification of the U.S.-Korea Economic Agreement, engaging in autonomy movements, and participating in the most significant issues of the April Revolution period such as the reunification movement and the struggle against two oppressive laws.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Daegu, April Revolution, Perception and Practices,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